

野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오늘 가결 전망

1일 상정...24시간 이후 투표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추진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 與, 곧바로 필리버스터 시작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에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등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임명 당일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전을 위협해 방통위 설치법 위반 △기피신청 의결에 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임명장을 수여 후 이석하고 있다. 뉴스시

여할 수 있는데도 회의를 소집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 위반 등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의결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견 없이 당론 추진됐다"며 "이 위원장 인사정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법안카드 횡령 의혹까지 담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

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등은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방통위 회의 과정을 보면 모든 과정이 2시간 만에 해결됐다. 절차적인 위법성, 공정한 심사 여부 등을 포함해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옹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답을 정해놓고 '묻지마 탄핵'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65조 등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한다고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등 야당은 2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해당 법안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상정이 예고돼 있다.

상정 이후 앞선 절차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7월 국회 회기인 3일까지 2박 3일간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며 여야가 또다시 격돌할 전망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 '국정농단 제보센터' 가동... "무도한 정권 탄핵"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보받는 '국정농단 제보센터'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탄핵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시작한다"며 대통령실 내선 번호 끝자리가 같은 제보 연락망을 공개했다.

그는 "국민의 진심이 무엇인지 무도하고 무능한 정권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열겠다"며 "(제보 전화가) 나르는 진실은 탄핵을 해야 하는 100개 사유, 1만 개 사유가 되어 검찰 독재를 종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방송 장악 앞잡이었던 이진숙 씨를 끝내 방통위원장에 앉혔다"며 "회전문 인사 정도가 아니라 막장 좀비 인사라고 불릴 만하다. 하루빨



리 윤석열 월드를 끝장내야 정신 고문에서 국민이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모두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당 탄추위는 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낱알이 밝혀내고 유형별로 분류해 증빙 자료를 하나씩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탄추위는 매주 목요일 공개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위원회(박은정 의원 총괄), 국정농단·진상규명위원회(신장식 의원), 시민의물결(신장식·김재원 의원) 등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탄추위 활동을 통해 탄핵·정권 퇴진을 위한 특검·국정조사,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전남 현안 지원 요청

전서현 의원·이상민 장관 면담 "인구소멸 극복 예산 확보 총력"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1일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화진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전서현 전남도의회원이 함께 참석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실정에 대해 설명하고 도민 복지 증진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건의했다.

두 의원은 총 사업비 420억원이 소요되는 '전남도청 민원인 전용주차장 건립'을 건의, 전남도청에서 실시되는 교육이나 설명회 등 각종 행사 때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발생하는 도민 불편 해소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흥군 치안강화를 위한 '고흥군 해양경찰서 건립(200억원)'과 외국인 주민의 복지·교육·의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맨 왼쪽)과 전서현 전남도의회원은 1일 민생 현장 점검을 위해 전남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남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전남도당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 주민 복합지원센터 건립(100억원)'도 건의했다.

또한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맞춤형 통합지원센터 건립(82억원)' 사업을 통해 전남 서남권의 양질의 의료복지 및 안정적 출산 지원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은 "전

남도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 확보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부처, 국회 등을 방문해 주요 현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조인철, "사이버릭카 수익 몰수" '뜨양 방지법' 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사진)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신서비스 상에서의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영상 업로드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고 있어 제2, 제3의 뜨양, 장원영이 언제든지 발



생활 수 있는 구조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추징 위반행위 범위에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포함해, 비방 영상을 통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 창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관련 피해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당 살려달라" 김두관, 호남당원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김두관 당대표 후보가 1일 광주를 찾아 호남 당원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은 정권탈환과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의 실상은 내부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고 독주체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지상과제는 정권 탈환이다. 내부 단결과 외연 확장이 핵심"이라

며 "이 후보를 호위하는 소수 강경 개혁의 딸"들이 자기와 조금만 입장이 달라도 문자 폭탄, 수박 깨기, 탈당 요구 등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는 당내 단결을 깨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현 세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혁신당과 연대가 아니라 경쟁하고 있다. 외연 확대에도 실패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기 퇴진과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동성이 살아 있는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김두관이 아닌 민주당을 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윤 정부 조기 종식을 위해 시민과 당원들이 합심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강원, 대구·경북, 울산·부산·경남, 충남·충북에 이어 전북(3일), 광주·전남(4일), 경기(10일), 대전·세종(11일), 서울(17일)에서 지역 순회 경선을 한다. 이어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정성현 기자